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 대토론회 지상중계

“광주, 땅값·인프라·지반 최상 조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가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 광주국제과학교류협력센터에서 열렸다.

광주 첨단산단 효율 대덕의 10배 내륙삼각 배치 균형발전에 필수

◇임기전 전남대 공소재부품연구원 소장=과학벨트 조성은 연구기반을 설립하는 것과 이를 담기 위한 과학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 산단비즈니스 시대였다면, 90년대는 기술비즈니스 시대, 2020년은 과학비즈니스 시대다. 이를 준비해야 한다.

◇임기전 전남대 공소재부품연구원 소장=과학벨트 조성은 연구기반을 설립하는 것과 이를 담기 위한 과학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 산단비즈니스 시대였다면, 90년대는 기술비즈니스 시대, 2020년은 과학비즈니스 시대다. 이를 준비해야 한다.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이 있다. 또 광산업 등 첨단산단의 투자대비 산업화 효율은 대덕단지 10배 이상에 달한다. 아울러 광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청정환경과 평탄지형의 저렴한 땅값의 부지가 있고,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예술도시 등 최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1978년 기상관측 이후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없어 중이온가속기 설치의 최적지로서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신용진 조선대 자연과학대학장=R&D성과물(산업기술)과 배후산업단지(생산시설)의 공존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고, 기초과학연구원 설립·대형연구시설 설치·비즈니스기반 구축·국제적 도시환경 조성·기초과학 거점 조성 등을 R&D 특구 기반조성 사업과 동반 추진해야 시간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광주-대구-대전에 구축된 R&D 특구와 연계해 과학벨트를 내륙 삼각벨트 분산 구축해야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박성주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응용연구소장=독일·일본·미국 등은 과학벨트의 분산배치 운영으로 연구성과와 경제효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광주·대구·대전 등 내륙 삼각역 특구 기반조성 사업과 동반 추진해야 시간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정성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장=과학벨트 호남 유치를 위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열망도 뜨겁다.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 결의에 한 뜻은 모든 만큼 종합적인 여건이 가장 우수한 호남권에 과학벨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내망기자 mjna@kwangju.co.kr

김영진의원 “광주에 본원, 대전·대구에 분원 뒀야”

민주당 김영진 의원(서구 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광주에 본원을 두고, 대전과 대구를 연계하는 내륙삼각벨트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독일 뮌헨의 막스플랑크연구소(MPG)와 다름슈타트의 국립 중이온 가속기협회 등을 둘러본 결과 한국의 과학벨트 입지는 국토 균형발전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국제적 석학 영입 추진, 지반의 안전

성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막스플랑크연구소도 같은 이유로 독일 전역에 80여 개 연구소가 분산배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막스플랑크연구소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사이에 과학기술 협업체

이 긍정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예상 밖 수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폭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방문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오는 5월 22~2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심사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미분양편 공공임대 전환”

강운태시장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강운태 광주시장이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이 미분양될 경우 이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수촌 아파트 미분양편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2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재건축을 통한 선수촌은 도시재생, 주민 숙원, 시 재정 감안 등 다양한 검토 끝에 내리진 결정이었지만 들어오려는 기업이 없었다”며 “그나마 협상 테이블에 앉은 현대건설에 10%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시가 임대아파트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조건은 전국 50개 업체에 공문으로 똑같이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날 재건축 선수촌이 명분만 아니라 실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건축 선수촌은 미분양이 될 경우에만 한정해 시 재정이 일부 투입될 수도 있으나 도시외곽 그린벨트에 선수촌 단지를 조성할 경우 초기자본으로 6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회수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수촌이 도심 외곽에 위치할 경우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투자도 전제가 될 수밖에 없어 비용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시의회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검토해 논의해서 보증 동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최근 현금청산 가구 중 10%를 초과해 발생하는 조합원 미분양아파트를 현대건설로부터 매입하고, 일반분양을 한 후 미분양 발생 시에는 미분양 물량의 10%를 사들이는(단 미분양물량이 500가구 이상 발생할 때 100가구를 매입한다) 내용의 U대회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를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U대회 선수촌’ 처리 여부 행자위에 일임

광주시의회가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 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를 처리 여부 소관 상임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21일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본회의 상정이 유보된 ‘2015 광주 하계U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참여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동의안 처리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 일임하고, 행정위는 오는 24일 상임위를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행자위는 U대회 선수촌 재건축 사업자인 현대건설 측에 미분양 물량 매입 보증을 해줄 경우 지원규모 폭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발생시 광주시와 조합원의 책임소재 범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조합 측이 보낸 동의서(각서)가 조합장 개인 명의인지, 조합원 전체의 의견인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김영남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장은 “오는 24일 상임위를 열고 의원

간담회 형태로 U대회 선수촌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본회의 상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현금청산가구 중 10%를 초과해 발생하는 조합원 미분양 아파트를 현대건설로부터 매입하고, 일반분양을 한 후 미분양 발생 시에는 미분양 물량의 10%를 사들이는(단, 미분양 물량이 500가구 이상 발생할 때 100가구를 매입한다) 내용의 U대회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를 시의회 제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확 바뀐 전남도 간부회의 쏟아진 제안...뜨거운 토론

전남도 간부회의가 달라졌다.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로만 채워졌던 회의 방식이 토론회로 바뀌면서 현안에 대한 부서간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등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회의 문화가 조성되는 분위기다. 전남도는 21일 오전 박준영 지사 주재로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및 의견을 교환했다. 그동안의 간담회는 각 실·국장들의 업무 보고가 회의시간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고 현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일

도 전무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부서의 현안 보고가 마무리된 뒤 다른 부서 간부들이 정책을 제안하거나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드럽게 진행됐다. 관광문화국의 ‘중국 관광객 유치’보고와 행정지원국의 ‘행복마을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가 끝난 뒤에는 10여명의 간부들이 ‘제주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중국 언론을 통한 연중 광고’, ‘소방관광객 유치 방안’, ‘연안쿠르즈 선박 확보’, ‘도시 초등학교와 자매결연

통한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한옥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열띤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정책기획관실의 ‘제안제도 활성화’정책에 대한 제안도 잇따라 임영목 녹색성장정책실장이 “일반 공무원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 1년에 책한 권씩 낸다”면서 “전문성을 갖추면서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 참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문부규 소방본부장은 “우수 제안을 한 공무원에게 주는 가점을 근무평정이 이뤄지는 시기에 맞추고 제안을 한 직원뿐만 아니라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시킨 직원도 함께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zardous Person Self-Management'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It features a woman's face and text: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Seeing danger is the start of safety). The ad lists benefits like '경제적 이익' (Economic benefit), '더 안전하게!' (Safer!), and '더 건강하게!' (Healthier!).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